

---

# THE BROKEN BARRIER

허물어진 장벽: 수입 수산물 이력 관리 실태, 문제점 및 개선 제언

---



## 차례

<b>1. 요약</b>	<b>3</b>
<b>2. 서론</b>	<b>5</b>
<b>3. 수산물 수입 현황 및 이력 관리규정</b>	<b>6</b>
3.1. 수산물 수입 현황	6
3.2. 이력 추적 관리규정	7
<b>4. 현재 이력 추적 관리규정의 문제점</b>	<b>9</b>
4.1. 핵심정보요소(KDEs) 누락	9
4.2. 과도하게 간편한 어획증명서	13
4.3. 제한적인 적용 범위	17
4.4. 투명성 부족	19
<b>5. 제언사항</b>	<b>21</b>

## Abbreviations

AIS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CC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	KDE	핵심정보요소(Key Data Elements)
CDS	어획증명제도(Catch Documentation Schemes)	STS	수산물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
EEZ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UVI	선박 고유식별번호(Unique Vessel Identifier)
FAO	유엔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1. 요약

한국은 EU,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이며 세계 1위 수산물 소비국이다.<sup>1</sup> 1인당 소비하는 수산물이 연 70kg에 달하는데,<sup>2,3</sup> 이는 일본 46kg, 미국 22.3kg임을 고려하면 수산물이 우리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sup>4</sup>

한국은 수입 수산물 관련하여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일부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 측면에서는 이를 감지하고 억제할 만큼 보호벽이 강력하지 않다. 이로 인해 IUU 어업 관련 수산물이 우리나라의 규제망을 피해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수산물 주요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IUU 어업지수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고,<sup>5</sup> 베트남은 2017년부터 유럽연합(EU)으로부터 IUU 어업국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상태이며,<sup>6</sup> EJF조사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어선에 만연한 인권 침해 참상이 드러난 바 있다.<sup>7,8</sup>

IUU 어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 생물다양성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꼽힌다.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중 대표적인 무역장치는 어획증명제도(Catch documentation scheme, CDS)와 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 STS)가 있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여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했고, 수입 수산물 이력 추적을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의 형태로 이력을 관리한다. 2017년 원양산업발전법상 어획증명제도(CDS)를 도입하여 영상가이석태, 긴가이석태 및 콩치 등 3개 어종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외국 정부에 어획증명서(CC) 발급을 요구했다. 또한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 이력관리 의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 받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상 21개 수입 어종에 대해 이력 신고를 의무화했다.

정부가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 규정을 포괄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행중인 CDS는 당시 국내외적 압력에 의해 어종을 선정했기에, 이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위험성 있는 수입 수산물을 걸러내기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EJF는 심도 있는 조사 결과, 우리나라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에는 4가지 주요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IUU 어업 또는 인권 침해와 연루된 수산물이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 수입된 사례 145건을 제시한다.

### | 현재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의 4가지 문제점과 실제 사례

#### • 어획증명제도(CDS)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STS)에 필수 정보 누락

수산물 공급망의 전 단계를 추적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핵심정보요소(KDE)라고 불리는 육하원칙에 따른 위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EJF 등 국제 NGO는 국가 수준 및 다자협정간 CDS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17개 KDE를 발표했다.<sup>9</sup> 그러나 EJF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CDS상 KDE는 EU, 미국, 일본 등 다른 시장 국가에 비해 뒤쳐져 17개 KDE 중 5개(30%)만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12개 KDE 중 6개는 보완이 필요한 한편, 6개는 아예 빠져있다. 빠진 6개 KDE는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IRCS), 제품 유형, 양륙항, 가공장소, 어구에 관한 정보이다. 또한 수입 STS는 국내 수산물 이력제에서 요구하는 KDE의 절반 수준만 요구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수산물이 쉽게 국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 사례:** 한국 어획증명제도(CDS)의 KDE가 누락되어, 2022년 2월 25일 대만 정부로부터 불법어업 행위로 처벌받은 대만 선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대만산 콩치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간 12건이나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

#### • 과도하게 간편화된 간편어획증명서 허용 (서아프리카산 긴가이석태 및 영상가이석태)

서아프리카산 이석태류 수입시 확인하는 간편어획증명서는 요구 정보가 매우 적으므로 IUU 어업과 관련이 있는지, 위조 문서인지 가려내는 것이 어렵다.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외지인들의 IUU 어업과 저인망으로 이뤄지는 생태 파괴적인 조업 방법 등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현실을 반영한 수입 수산물 이력 추적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실제 사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시에라리온에서 조업하는 2척의 트롤 어선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가이석태 및 긴가이석태가 총 34건 한국으로 수입되었다. 이 2척의 트롤어선은 모두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무단 조업, 대형 어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해상에서 카누로 옮겨서 현지인이 잡은 것으로 둔갑시키는 등 다양한 IUU 활동 기록을 가지고 있다.

## • 제한적인 적용 범위

핵심정보요소(KDE)가 아무리 충분해도, 적용 어종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의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진다. CDS 적용 어종 및 수입 STS가 적용되는 어종은 2021년 수입금액 기준 각각 2.1%와 12%에 불과했다. EIJF 조사 결과, 한국은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CDS 어종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제 사례:** 2021-2022년간 한국은 한 중국 선사이자 수출업체로부터 참치 및 참치 유사종 8건을 수입했는데, 이 중국업체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IUU 어업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은 가나 국적 선박의 실소유주이다. 이 선박은 훔친 그물망 등 금지된 어구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고, 어획량 보고를 부정확하게 한 혐의로 처벌되었다. 한편, 각각 중국, 러시아 및 이탈리아 선박으로부터 참치 및 유사종(39건), 명태(29건), 오징어(10건) 및 가자미(13건) 등이 91건 수입됐는데 이 수산물은 IUU어업 및 관련 강제 노동, 인권 침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 투명성 부족

CDS상 정보는 일반공개가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상 정보도 국내 수산물 이력제와 달리 일반인에게 비공개이다.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합법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포장지 라벨에 적힌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알 방법이 없다(자세한 사항은 3.2 참조). 소비자의 신뢰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작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수산물 구매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위 4가지 주요 문제점과 실제 사례를 살펴 보면, 한국의 느슨한 규제망과 산발적인 관리망을 통해 IUU 어업과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고위험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쉽게 들어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으로 한국은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규제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EIJF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공급망에서 IUU 어업 및 인권 침해 관련 수산물이 퇴출되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 정부는 투명성과 추적성 강화를 위해 먼저, 수산물 이력 추적 규제에 필요한 모든 핵심정보요소 즉 KDE(key data elements)를 확대하고, 어선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이력 추적을 확장하며,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윈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수산물 구매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 감천항 (출처:<https://www.kogl.or.kr/index.do>)

## 2.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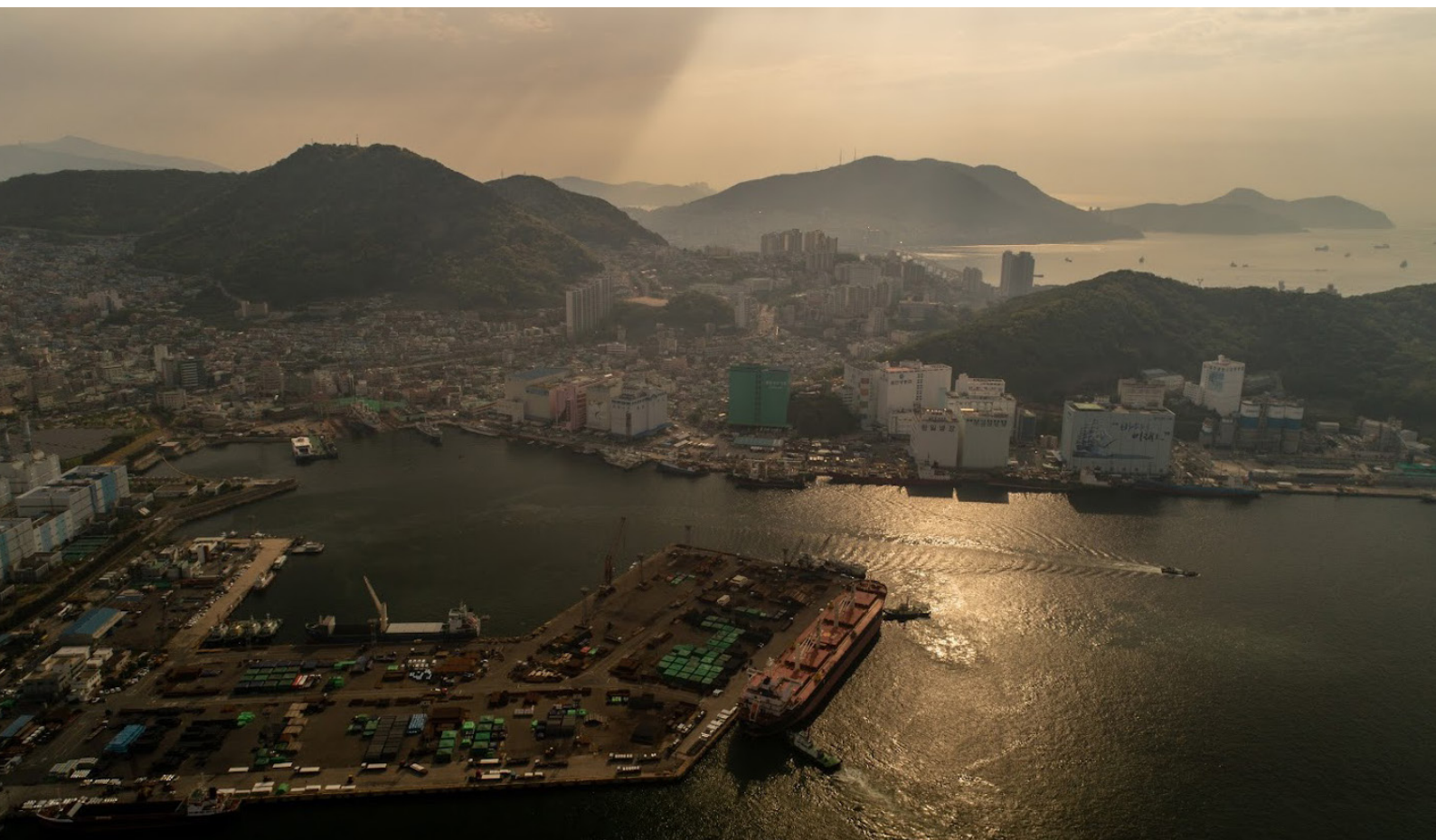
전 세계 수산자원은 35.4%가 남획되었고, 57.3%가 최대치로 개발되어 수산자원의 7%만 보전된 상태이다.<sup>10</sup> 이러한 심각한 고갈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IUU 어업이다.<sup>11</sup>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 및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산자원에 의존도가 크고 취약한 연안 공동체의 생계를 위협한다. 전 세계 수산물의 약20%가 불법으로 어획 및 판매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가치는 USD 260-500억불(36-69조원)로 추정된다.<sup>12</sup>

IUU 어업이 지속되는 이유는 세계 수산물 공급망이 워낙 불투명하여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망망대해에서 외부와 단절된 조업 환경,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엮여 있는 수산물 공급유통망 구조로 인해 어선과 어획물, 시장 진출 경로 및 실질적 소유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힘들다. 수산물 추적 이력 정보가 없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해양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는 IUU 어업 결과물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불법어업 종사자들은 대개 부대 비용이 들지 않기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입되면 합법적인 어업자의 경제적 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

수산물 이력 추적성 관리가 포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IUU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수산물이 국내 유통 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철저한 이력 추적성 관리는 IUU 어업 근절 뿐 아니라 원산지를 둔갑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도 적발 및 조치할 수 있다.<sup>13</sup>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최대 시장국들은 이러한 수입 수산물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수입 수산물 이력 추적성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수산물 이력 추적성 관리를 통해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 우리나라 국민 개인 또는 유통업체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어획물을 구매하고 판매할 위험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2022년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3년 연속 수산물 안전성(63%) 다음으로 수산자원 보전(56%) 및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원 확보(26%)가 중요하다고 답했다.<sup>14</sup> 국가 차원의 수산물 이력 추적 규제는 대표적으로 어획증명제도(CDS)와 수입 수산물유통이력제(STS)를 통해 이뤄지며, 이 두 가지 규제를 통해 수입 수산물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한국의 수산물 수입 현황, 수산물 이력 추적 규정 - 어획증명제도(CDS)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STS)를 분석하고, 4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 이 문제점으로 인해 IUU 어업 및 노동 착취로 어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유통된 실제 사례 145건을 공개한다. 마지막 제언사항에서는 한국이 주요 수산물 시장국으로서 투명성을 개선하고 추적성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3. 수산물 수입 현황 및 이력추적 관리규정

#### 3.1. 수산물 수입 현황

한국은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으로 2021년 기준 132개국으로부터 총 6.4백만톤, 62억불 어치를 수입했다.<sup>15,16</sup> 주요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등이며 상위 5개국이 수입액의 67%를 차지한다.<sup>17</sup> 이 중 상위 3개 국가는 IUU 어업 측면에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1. 한국 수산물 수입 (2021) 단위: 톤, 천미불

	교역국	중량 (톤)	금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2021년 수입액 기준)
	대세계	6,374,806	6,182,432	100%	새우, 연어, 명태, 게, 오징어, 문어
	상위 5개국	1,733,008	4,156,694	67%	
1	중국	902,027	1,300,876	21%	낙지, 냉동조기, 냉동오징어, 냉동꽃게
2	러시아	489,709	1,219,826	20%	명태, 대게, 게, 대구
3	베트남	173,485	808,389	13%	냉동새우류, 쭈꾸미, 조제새우류, 냉동 명태연육
4	노르웨이	93,888	575,974	9%	대서양 연어, 태평양 연어, 고등어
5	미국	73,900	251,629	4%	명태냉동연육, 어분, 넙치류, 냉동 명태

출처: 한국수산물자료포털(www.fips.go.kr)

#### | 1위 교역국 - 중국

세계 최대의 어선단을 보유함과 동시에 2021년 기준 IUU 어업 지수 1위 국가이다.<sup>18</sup> 실제로 20년간 불법어업 및 관련 범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sup>19</sup> EIJF 도 공해 및 취약한 개발도상국 연안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상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참혹한 인권 침해 실태와 불법어업간 밀접성이 세계적으로 공개했다.<sup>20</sup> 더불어, 우리나라는 중국 어선의 IUU 어업의 피해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서해 EEZ 및 동해에서 심각한 불법어업 행태는 익히 알려져 있다.<sup>21</sup>

#### | 2위 교역국 - 러시아

러시아는 2021년 세계 IUU 어업 지수 2위 국가이며, 국제 규정 이행 미준수 및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 미비가 주요 득점 요인으로 꼽혔다.<sup>22</sup> 러시아의 대게 관련 만연한 불법어업 행태 보고서는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sup>23</sup> RFMO 에서도 러시아 국적의 문제 선박에 대해, 러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은 격년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IUU 보고서에 2017년과 2021년 러시아를 IUU 국가 목록에 등재했다.<sup>24</sup>

#### | 3위 교역국 - 베트남

베트남은 유럽연합(EU)로부터 IUU 어업 관리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이유는 베트남 IUU 관련 법 규정 부재와 자국 선박 모니터링 및 관리 미흡이다.<sup>25</sup> EIJF보고서에도 베트남 새우 생산과 관련하여 아동 노동 및 인권 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sup>26</sup>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주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 모두 IUU 어업과 연관이 높은 '고위험국'인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시장국으로서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는지 - 수입 수산물 추적성 관리 제도를 정리 및 분석했다.

## 3.2.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 규정

이력추적은 일반적으로 어획, 양육 및 가공에서 최종 판매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에 걸쳐 수산물을 추적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력추적 관리 도구는 어획증명제도(CDS)와 수산물이력제(STS)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IUU 어업 위험을 식별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 관리한다.<sup>27</sup>

이력추적 관리 규정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로는 UN 식량농업기구(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규범,<sup>28</sup>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sup>29</sup>” 및 “CDS에 대한 자발적 지침<sup>30</sup>” “어업 규정 준수를 위한 수산물 이력추적<sup>31</sup>”이 있다. 국내법에서는 어획증명제도(CDS)는 원양산업발전법,<sup>32</sup>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imported STS)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p>33</sup>을 따른다.

**어획증명제도(CDS):** 해양수산부는 2017년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쫄치 등 3개 어종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CDS를 채택했다.<sup>34</sup> 우리나라가 2015년 EU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업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이 CDS 도입 계기였다. 당시 해수부는 IUU어업에 취약하고 국내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품목 즉, 서아프리카 민어류를 대상으로 어획증명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10년전, 예비 IUU 어업국 지정되었던 것은 2010년부터 한국의 일부 원양어선들이 서아프리카, 특히 시에라리온에서 민어류(일명 ‘침조기’)를 불법 어획했다는 증거를 EIJ가 EU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sup>35,36</sup> 쫄치는 2016년 IUU어업에 연루된 대만인과 대만인 소유의 바누아투 국적 쫄치 봉수망 어선 약 90척이 쫄치 어획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이후 CDS 어종에 포함됐다.<sup>37</sup>

CDS 절차는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있는 입항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에서 어획증명서를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첨부 제출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수출국의 어획증명서 또는 간편어획증명서를 확인한다.<sup>38</sup> 어획증명서를 미첨부하거나 부족한 경우, 수품원은 그 선박의 입항 또는 양륙을 거부할 수 있다.<sup>39</sup>

**수산물 이력제(STS):** 수산물 이력제는 국내산 수산물 이력제와 수입산 수산물 유통이력제가 별도로 운영되고, 근거 법률도 다르다. 국내산 수산물 이력제는 2008년 해수부가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sup>40</sup> 소비자들은 수산식품 패키지에 바코드 또는 QR 코드를 통해(아래 그림1 참조)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로 상품명, 생산지, 유통업체 및 가공 공장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sup>41</sup> 국내산 수산물이력제는 의무 신고 어종 2종인 생굴, 굴비 외에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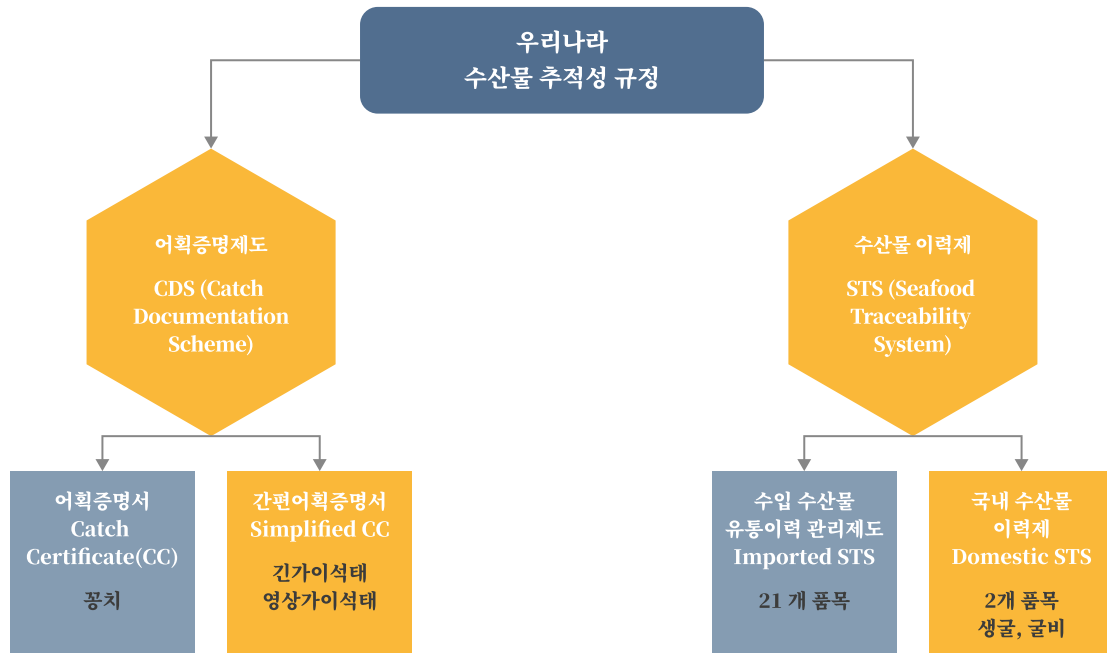
2020년 10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는 관세청의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 중 수입 수산물 관리를 이관받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수입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해수부가 관리하기 시작했다.<sup>42</sup> 해수부가 지정한 21개 품종의 수입 및 거래업자는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시스템에 입력 하도록 하고 있다.<sup>43</sup> 해당 신고서에는 신고자 정보와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자, 품명, 원산지, 판매 내역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sup>44</sup> 이 시스템상 정보는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이다. 21개 의무 신고 품종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쫄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머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이다.

그림 1: 국내 수산물 이력제 표시



출처: fishtrace.go.kr

표 2: 한국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 규정



### 세계 주요 시장국의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

#### 유럽연합:

EU는 2008년 IUU 통제법을 도입하여 모든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제도와 제3국에 대한 IUU 어업 평가 절차를 수립함.<sup>45</sup> 수출국은 합법성,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잡는 어업에 대해 어획증명서(CC)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함. TraceFish 시스템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해면어업 및 양식 어업 제품의 전체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구축됐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관련 추적 가능한 정보를 제공

#### 미국: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은 잠재적인 IUU 어업 또는 수산물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13개 품종에 대한 이력 정보를 보관관리함. SIMP는 수입업자가 수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어획에서 수입 통관에 이르는 주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sup>46</sup> 2022년 11월, 미국 FDA(식품의약품청)는 대부분의 수산물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저장단계까지 이력 기록 보관을 의무화함. 신규 추적성 관리시스템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됨.<sup>47</sup>

\*SIMP 13개 품종: 전복(Abalone), 대서양대구(Atlantic Cod), 대서양꽃게(Blue crab(Atlantic)), 만새기(Dolphinfish(Mahi-mahi)), 바리류(Grouper), 왕게(King crab(red)), 태평양대구(Pacific Cod), 통돮(Red snapper), 해삼(Sea cucumber), 상어류(Sharks), 새우(Shrimp), 황새치(Swordfish), 참치류(날개다랑어(Albacore), 눈다랑어(Bigeye), 가다랑어(Skipjack), 황다랑어(Yellowfin), 참다랑어(Bluefin))

#### 일본:

T2022년 12월부터 특정 수산 동식물 등의 국내 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산유통적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4개 품목에 대해 추적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적법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sup>48</sup> 2년주기로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어획증명서 제출 의무 4개 품종: 고등어류, 태평양 품치(Pacific saury), 정어리(Japanese sardine), 오징어(Squid/cuttlefish species)



## 4. 현재 수입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의 문제점

EU 및 미국, 국제NGO의 권장 KDE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은 4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IUU 어업 및 노동 착취와의 연관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윤리적인 수산물을 소비하자는 국제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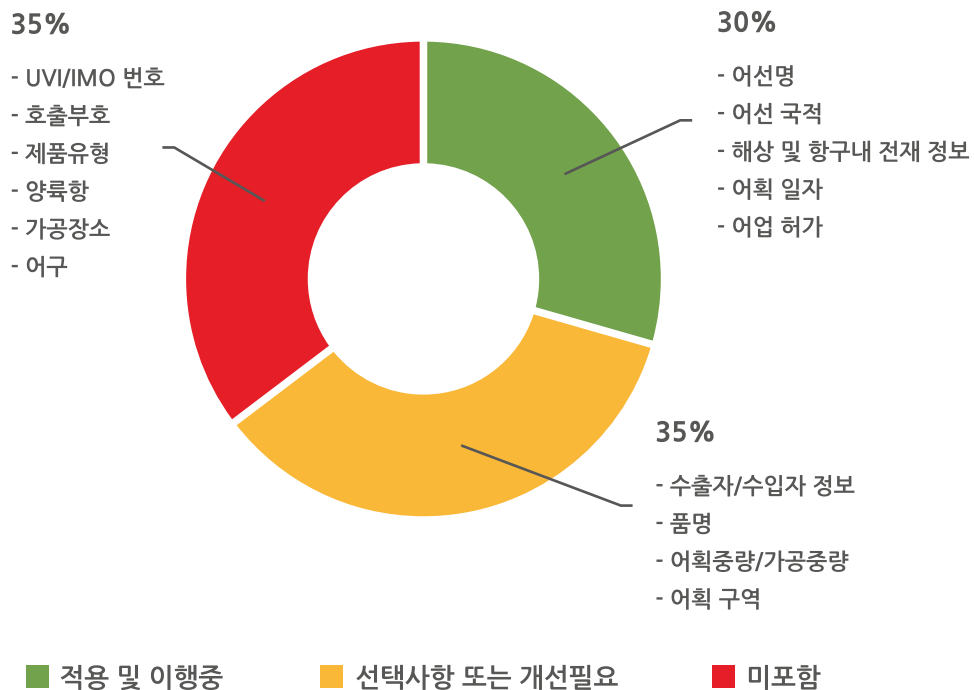
### 4.1. 핵심정보요소(KDE) 누락

KDE는 수산물 이력 추적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다. KDE는 일반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수산물이 생산되고 이동하는지에 관한 정보이다.<sup>49</sup> KDE는 수산물의 합법성을 결정하고 공급망의 모든 단계별로 이력을 추적하는 데 꼭 필요하다.<sup>50</sup> 현재 CDS와 수입 STS에서 요구하는 KDE는 당시 IUU 어업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내외적 압력이 작용되어 IUU 어업 또는 인권침해에 취약한 어종이 어떤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누락됐다.

### 어획증명제도(CDS)의 KDE

EJF 등 국제 NGO가 CDS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17개 KDE를 개발하여 2020년 초 발표했다.<sup>51</sup> EJF 분석 결과, 현재 한국의 CDS는 권장 KDE 17개 중 5개(30%)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반면,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국은 각각 76%, 71%, 65%를 충족한다.<sup>52</sup> EU와 미국은 현재 각각의 수산물 수입 규정 기준을 개선중이며, 권장 KDE 를 대부분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어획증명제도 핵심정보요소(KDE) 분석



6개 KDE는 보완이 필요한 한편, 나머지 6개는 한국 CDS에서 빠져 있다. 빠진 6개 KDE는 IMO 번호, 호출부호(IRCS), 제품 유형, 하역/양륙항 및 가공시설, 어구 등이다. 이 모든 것이 IUU 어업의 위험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이다.

먼저 IMO 번호는 IUU 위험도 분석시 가장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유 정보이다. IMO 번호는 자동차 번호판과 같아서 일단 번호를 발급받으면 그 선박의 국적, 소유권 정보 이력을 알 수 있다. 선명이 바뀌어도 이 번호는 폐선때까지 선박과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호출부호(IRCS)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2개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영숫자 조합의 고유 ID이다. 양륙항과 양륙일자는 수산물 어획 이후 최초로 육상 공급망으로 전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력 추적에 핵심적인 정보이다.

가공시설 정보는 공장명, 주소, 사업자번호, 허가증 및 위생증명서 번호와 가공일자를 포함한다. 어구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어획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CDS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에 관한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 또는 재수출 업체명, 주소 및 전화 번호 정보도 포함시켜서 유통단계에 모든 관계자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수출업체 주소와 연락정보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연락할 수 있다. CDS 상 어획 지역을 표기할 때도 어획지역이 속한 RFMO 이름 및 FAO 어업 지역 코드와 같은 세부 정보 역시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입산 수산물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 그림2. 대한민국 어획증명서(CC)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17. 6. 30.>

대한민국 어획증명서 (THE REPUBLIC OF KOREA CATCH CERTIFICATE)			
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2. 승인당국(기관명, 주소, 연락처)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contact details)	
3. 조업 선박명 Name of the fishing vessel		4. 조업 선박의 국적 Nationality of the fishing vessel	
5. 조업 선박의 선장 Master of the fishing vessel	서명 Signature	6. 조업 선박의 운전자 및 연락 정보 Operator of the fishing vessel and contact details	
7. 어종 Species		8. 중량(kg) Weight(kg)	
9. 조업 기간 Period of the fishing operation		10. 조업 수역 Area of the fishing operation	
11. 조업허가 번호 Fishing authorization number		12. 조업허가 당국 Issuing authority of the fishing authorization	
13. 해상 전재 transshipment at sea			
조업 선박의 선장 Master of the fishing vessel	서명 및 날짜 Signature and date	전재날짜/지역/위치 Transshipment date/Area/Position	전재 중량(kg) Weight of catches transhipped(kg)
수취 선박의 선장 Master of receiving vessel	서명 Signature	수취 선박명 Name of the receiving vessel	수취 선박의 기국 Flag of the receiving vessel
14. 항구지역 내 전재 Transshipment within a port area			
이름 Name	당국 Authority	서명 Signatur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전재 항구 Transshipment port	전재날짜 Transshipment date	날인 Seal(stamp)
15. 수출자 성명/서명/연락 정보 Exporter name/Signature/Contact details			
16. 당국 승인 Valid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성명/직위 Name/Position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of validation	날인 Seal(stamp)
수입자 성명/연락 정보 Importer name/Contact details		※ 이송정보 Transport details	
		선박명 및 기국 Vessel name and flag	컨테이너번호 Container number(s) 목록 첨부 List attached

Source: Enforcement rules of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표 3. 국가별 어획증명제도(CDS) 핵심정보요소(KDE) 비교 분석

모범사례/적용중	보완 및 개선 필요	누락/미포함
----------	------------	--------

	어획증명서(CC)상 핵심정보요소(KDE)	국제NGO 권장 사항	FAO 자발적 지침 <sup>53</sup>	유럽 연합 <sup>54</sup>	미국 <sup>55</sup>	일본 <sup>56</sup>	대한민국	
							어획증명서	간편어획증명서
누가	어선명							
	고유식별번호(IMO 번호)							
	어선 국적							
	호출부호 (IRCS)							해당 없음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정보						사업장 주소	
	수입업자 정보						사업장 주소	
무엇을	제품 유형- 냉동,냉장 등(FAO 코드)							
	품명						FAO 코드	
	어획 중량(kg)						어획/가공 중량간 미구별	어획/가공 중량간 미구별
	가공 중량 (kg)							
	해상 및 항구내 전재신고 및 허가							
언제	어획일자(조업기간)							
어디서	어획구역						EEZ 국가 코드, RFMO명, FAO 지역 코드	
	어업허가							
	양륙항							
	가공장소							
어떻게	어구							

## 수입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수입산 STS) KDE

수입산 STS의 운영 목적은 정부가 안전한 수입 수산물 유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모든 수입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방사능 검사 등 식품 검역을 하고 수입되며, 검역 결과는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된다. 그러나 정작 수입산 STS KDE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 검사(방사능 세슘 함유량) 결과나 유통기한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정보는 없고, 제품명, 원산지,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판매 내역이 전부이다. 안전한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과 현행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KDE간의 괴리가 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 주로 거래 기록에 초점을 맞춘 KDE는 수산물의 안전성은 물론 합법성 및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수입산 STS는 국내 수산물이력제와 비교할 때 KDE 수준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미달한다. 국내산과 수입산에 요구하는 이력 정보가 각기 다르고, 국내산 따로 수입산 따로 2개의 시스템에 정보가 분산되어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수산물 이력 추적성을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안전성 측면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도 고위험 수산물은 2개의 별도 이력제의 사각지대를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4. 한국 수산물 이력관리시스템(STS)의 KDE 비교 분석

모범사례/이행중		미포함		
	핵심 데이터 요소(KDE)	NGO 권장 사항	국내산 수산물이력제 (국내산STS) <sup>57</sup>	수입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 (수입산STS)
누가	선박명			
	생산자(어부) 정보			
	고유식별번호(IMO 번호)			
	선박등록정보(국적, 항구, 지자체)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정보		해당 없음	
	수입업자 정보		해당 없음	
	가공업체 정보			
무엇을	제품 유형(상태: 냉동/냉장)			
	품명			
	어획 중량/가공 중량(kg)			
언제	어획일(조업기간)			
어디서	조업구역			
	어업허가			
어떻게	어구			
판매내역	수입일자, 수입신고번호		해당 없음	
	공급 업체 정보 : 제품, 중량, 일자, 공급 업체 이름 / 주소 / 연락처, 이력번호			
	구매자 정보 : 제품, 중량, 일자, 구매자 이름 / 주소 / 연락처, 이력번호			
안전성	유통 기한			

## 실제 사례: 대만산 고위험 콩치 수입 12건

태평양 콩치(spp. *Cololabis saira*)는 한국으로 수입되는 가장 흔한 어종으로 약 90%가 대만산이다.<sup>58</sup> 대만은 2021년부터 미국 정부의 IUU 예비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sup>59</sup> 대만산 콩치는 CDS와 수입산 STS 의무 어종으로 현존하는 수입 수산물 추적성 관리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어종이다. 그러나, EJF 조사 결과, 추적성 관리 규제에도 불구하고 IUU 어업의 위험성 높은 콩치가 제재 없이 한국에 수입되어 유통되었다.

EJ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만 회사인 안퐁리안만 수산(An Fong Lian Man Fisheries Co.Ltd)로부터 냉동 콩치가 12건 수입됐다. 이 회사는 안퐁수산회사(Anfong Fishery Co.)와 주소가 동일한 계열사이며 ANFONG No.111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sup>60,61</sup> 이 ANFONG No.111은 면허 없이 연어를 어획하고 미보고한 혐의로 2022년 2월 25일 불법 어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sup>62</sup> 그 결과, 안퐁 리안만 수산회사 계열사인 안퐁 수산회사는 대만정부로부터 미화 16,500달러(2,4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았다.<sup>63,64</sup>

물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한국으로 수출된 콩치 중 바로 이 ANFONG No.111 선박에서 어획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만의 불법어업 전과기록을 가진 선사와 주소가 동일한 수출업체는 콩치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어획증명서를 제출했고, 한국 정부는 문제없이 수입을 허가한 것이다.<sup>65</sup> 불법어업으로 벌금형을 받은 선사와 수출업체의 주소가 동일한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어획증명서상 '누가'에 관한 정보-수출업체의 주소 및 거래처 정보를 얻었다더라면, 해당 수입산 콩치의 IUU 위험성을 식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 CDS 및 수입산 STS상 누락된 KDE를 통해 범죄 배경을 가진 콩치는 한국으로 수입되었고, 국내에 유통되었다.

## 4.2. 과도하게 간소화된 간편어획증명서

간편어획증명서는 20GT 미만의 어선에서 잡은 수입산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이하 '이석태류')에 요구된다.<sup>66</sup> 한국이 수입하는 이석태류는 서아프리카 국가인 기니(64%), 시에라리온(11%), 세네갈(4%)의 앞바다에서 대부분 잡히므로, 한국 정부는 이석태류를 현지 어민이 소유한 20GT 미만의 카누선이 어획한 것으로 간주한다.<sup>67</sup> 간편어획증명서는 생산자와 거래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KDE만 요구하므로 이석태류와 함께 제공되는 간편어획증명서는 쉽게 위조될 수 있고, 특히 대형 트롤 어선에서 잡은 이석태류도 현지어민이 잡은 것으로 허위 인증될 수 있다.

서아프리카산 이석태류는 우리나라 참조기와 생김새와 맛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벌이가 되는 상품이다. 한국 사람에게 조기/굴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아프리카산 이석태류는 '참조기/참굴비' 또는 '대서양조기'로 불리면서 '영광굴비' 대신 저렴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림3. 우리나라 조기와 서아프리카산 긴가이석태의 비교



참조기 (Yellow croaker/corbina)  
(spp. *Larimichthys Polyactis*)  
우리나라 서해와 동중국해 분포. 길이는 18-40cm<sup>68</sup>



B긴가이석태 (Bobo Croaker)  
(spp. *Pseudotolithus Elongatus*)  
세네갈에서 앙골라까지 서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분포, 수심 50m 펠에 서식하여 저층트롤과 정지망으로 어획. 길이는 19-47cm<sup>69</sup>

출처: 한국수산과학원

그림4. 대형 마트내 굴비 판매대



영광참굴비 4호 가격 55,000원  
영광참굴비 2호 가격 39,900원

기니산 긴가이석태와 국산 굴비가 섞여서 판매 중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움/2022.7월 촬영)

과도하게 간편화된 어획증명서 정보만으로 통과되는 서아프리카산 이석태류는 IUU 어업 관련 위험이 크다. 이석태류가 서식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앞바다는 현지 어민들만 어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JF의 오랜 조사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기니아, 가나,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외국인 소유 및/또는 외국 국적 어선(일반적으로 트롤 어선)의 불법어업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현지인의 수산자원 식량을 착취하고 지역 사회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sup>70</sup> 이석태류는 수심 50m 이내 저층에 서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획방법은 저인망 트롤(Bottom trawling)이다.<sup>71,72</sup> 상업적 저인망 트롤은 그물을 바다 아래로 내려 끌면서 퍼가는 방식으로 해저 서식지 및 어류 개체를 파괴하고 현지인들의 카누 그물을 찢어 버리기도 하는 등 상당히 파괴적인 어구로 알려져 있다.<sup>73</sup>

기니, 시에라리온 등 이석태류의 주요 수출국에서는 대부분 외국인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자체적으로 트롤 어선을 운영하거나 현지인의 카누에서 수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sup>74</sup> 일반적으로 이석태류는 외국인이 소유한 20GT 이상의 트롤 어선이 잡고, 현지인의 카누로 옮겨서 해안에 돌아와 가공 및 수출을 하는 것이 관행이다.<sup>75</sup> 이 관행으로 인해 이석태류의 생산자 세탁/둔갑 위험이 매우 커지는 것이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이석태류는 20GT 미만의 현지 카누에서 어획된 것으로 간주되어 간편어획증명서만 제출하면 문제없이 통과된다.

수출업체는 트롤어선과 가공시설을 모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어획증명서상 KDE만으로는 이석태류가 산업용 트롤 어선에 의해 잡힌 것인지, 현지 어민의 카누에서 잡힌 것인지 알 수 없다. 어획일자, 어획 구역, 해상 전재 관련 정보 등에 관한 KDE가 생략되었기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이석태류가 아프리카 해양 환경 파괴에 일조하고, 현지 공동체의 생계에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어업 방식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카누에서 잡은 어획물로 위장해서 수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서아프리카 이석태류의 IUU 고위험도를 고려하면, 현재 간편어획증명서상 요구하는 KDE만으로는 수입산 이석태류의 적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표 3 참조).



그림 5. 대한민국 간편 어획증명서(CC)

■ 원안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제식] <신설 2017. 6. 30.>

대한민국 간편 어획증명서 (THE REPUBLIC OF KOREA SIMPLIFIED CATCH CERTIFICATE)			
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2. 승인당국(기관명, 주소, 연락처) Validating authority(name, address, contact details)	
3. 어종 Species		4. 중량(kg) Weight(kg)	
5. 어획물을 제공하는 선박 목록과 선박별 어획물 중량 List of vessels that provided catches and weight of catches by each vessel (name, registration number) :			
선박명 Vessel name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어획물 중량(kg) Weight(kg) of catches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위 표를 별지로 첨부합니다. If there are more vessels to fill in, the table above may be annexed.			
6. 수출자 성명/서명/연락 정보 Exporter name/Signature/Contact details			
7. 당국 승인 Valid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성명/직위 Name/Position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of validation	날인 Seal(stamp)
수입자 성명 및 연락처 정보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 이송정보 Transport details	
		선박명 및 기국 Vessel name and flag	컨테이너번호 Container number(s) 목록 첨부 List attached



## 실제 사례: 간소화된 정보 요구로 시에라리온산 고위험 이석태류 수입 34건

시에라리온에서 우리나라로 이석태류를 수출하는 업체 중 한국인 소유로 밝혀진 곳은 2개 회사이다. 청강(Chung Gang fishing company) 및 선호수산(Sunho/Sunhu fishing company). 두 회사 모두 시에라리온에서 자체 트롤 어선을 운영하고 있으며<sup>76</sup>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를 운영한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이석태류는 트롤 어선과 현지 카누선에서 조달하는데,<sup>77</sup> 두 회사 모두 2020년 시에라리온 현지 어민들에게만 조업이 허락된 연안금지수역인 (Inshore Economic Zone(IEZ))에서 트롤선으로 무단 조업하다가 적발된 어선이자, 과거 IUU 조업 기록이 있는 어선을 소유하고 있다.

2021년 3월, 시에라리온의 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은 이 두 업체의 자국법 이행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다고 판단, 직접 방문 검색을 실시하고, 향후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폐업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강수산은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에 이석태류를 수출했으며,<sup>78</sup> 선호수산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0차례에 걸쳐 한국에 이석태류를 수출했다.<sup>79,80</sup>

청강수산(가공 및 무역 회사로 등록) 대표는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 켄트(Kent)에있는 페닌슐라 수산회사의 공동 소유주로 등록돼 있다.<sup>81</sup> 이 회사는 IUU 어업 선박이었던 MAHAWA 라는 트롤어선을 소유하고 있었다.<sup>82</sup> 2018년 11월, EJF 조사에 따르면 MAHAWA는 시에라리온과 기니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제 해양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였기에,<sup>83,84</sup> 이로 인해 MAHAWA의 선주는 기니 정부에 의해 벌금형을 받았다. 2020년 2월, MAHAWA가 시에라리온 연안내 불법조업하는 상황이 또다시 포착되어 EJF는 이 정보를 시에라리온 및 기니 정부와 공유했다. 그러나 당시 이 어선이 기니와 시에라리온 어느 국가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무국적 상태였기에 어느 정부도 이 어선을 기소할 수 없었다.<sup>85</sup> 선박의 현재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한국인 소유였던 이 선박에 대해 EJF는 한국 정부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선호수산 역시 가공 및 무역 회사로 시에라리온에 등록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시에라리온에서 ‘부산11’이라는 트롤 어선의 소유주였다.<sup>86</sup> EJF의 2019년 현장 조사 당시 부산 11 선박이 시에라리온의 어업허가 어선 명부에 미등록 상태로 바나나 섬 인근 시에라리온 해안 지역에서 조업 활동 중인 것을 포착했으나, 2022년 기준 현재 부산11호의 활동은 위치를 파악하거나 추적할 수 없었다.<sup>87</sup>



트롤어선 MAHAWA 어선에서 현지인 카누로 냉동 박스를 옮겨 담고 있는 모습 (2019.1월) @EJF



### 4.3. 제한적인 적용 범위

수입 수산물 추적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어종 - 즉 CDS 및 수입 STS 적용어종은 2021년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각각 2.1%와 12%에 불과했다. 한국 자국법상 수입 수산물이 IUU와 연관되었는지 식별하고 규제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대다수 어종이 IUU 위협에 노출되었고 남획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IUU 고위험 어종들은 쉽게 감시망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CDS 적용 어종은 이석태류 중에서는 긴가이석태와 영상가이석태 2종류 뿐이다. 불법어업 관련 업자들은 이석태류와 비슷하면서 CDS 규제를 비껴갈 수 있는 ‘붉은이석태’로 품목을 신고하고, 감시망을 피해 한국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IUU 위험도 분석을 기반으로 CDS 어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EJF 조사 결과에 따르면, CDS 적용을 받지 않는 어종 중 IUU 어업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수산물이 **지난 2년간 99건 수입됐다**. 99건 중 **8건**은 IUU 어업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중국 선사로부터 수입됐다. 가나 등록 선박의 실소유주인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참치와 참치 유사종**이 수입되었는데, 이 가나 등록 선박은 가나법상 금지된 총총한 그물망으로 어린 물고기를 싸쓸이하고, 허위로 어획량을 보고한 혐의로 가나 정부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91건**은 AIS 분석 및 인터뷰를 통해 정황상 유력한 고위험 수산물의 수입사례이다. 중국, 러시아 및 이탈리아 어선의 참치류 (39건), 명태(29건), 오징어(10건) 및 가자미류(13건)가 포함된다.

한편, CDS와 별개로 운영되는 수입 STS는 21개 어종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 제도는 수입 수산물의 적법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요소는 제외하고, 오직 국민보건 영향에 근거해 지정된다.

#### 실제 사례: 가나 불법 조업선의 실소유주 중국업체, 한국으로 참치 수출 8 건

2019년 6월, 중국 트롤 어선 LU RONG YUAN YU 956은 총총한 그물망 - 금지 어구를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를 싸쓸이하고, 어획량 허위보고 혐의로 가나 해역에서 체포되었다.<sup>88,89</sup> 이 선박이 주로 잡았던 어종은 현지 카누 어민들이 잡는 회유성 어족 자원이자, 가나 지역 공동체의 주요 식량 공급원이다. 이에 가나 정부는 LU RONG YUAN YU 956 어선의 중국 실소유주에게 미화 100만불(약 13억원)의 벌금형 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중국 업체는 불응하고 벌금을 내지 않았다.

2020년 5월, 이 선박은 유사한 범행 혐의로 재적발되었다. 이 선박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추가 처벌조치가 없었으며,<sup>90</sup> 여전히 가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다.<sup>91</sup> 이 선박의 소유주인 룡청 수산회사(Rong Cheng Ocean Ltd)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황다랑어와 다랑어류 8건을 한국으로 수출했다.



출처: Chinaglobalsouth.com (2020.8.25일자 기사)

또한, EJF의 선원 인터뷰와 다양한 정보원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불법 어업 및 노동 착취와 관련된 다랑어류(39건), 오징어(10건), 명태(29건), 가자미류(13건)가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정보 중 개별 선박에 대한 정보 및 수입 업체, 수입 기록은 요청시 제공 가능하다.

### 실제 사례: 불법어업 및 노동 착취와 관련된 중국산 참치 및 오징어, 러시아산 명태, 이탈리아 및 중국산 가자미 수입

**참치와 다랑어류, 오징어:**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간 5척의 중국어선은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 버렸으며, 돌고래 및 해양 포유류를 의도적으로 포획하고 죽인 것으로 의심된다. 2020년과 2021년에 이 5척의 선박에서 일한 선원 전원이 상당 금액의 급여를 감취당했고, 보증금 및 고용 수수료의 형태로 브로커 및/또는 인력업체에게 뺏겼다고 보고했다. 하루에 최대 20시간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 일쑤이며, 음식과 식수가 항상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 문제 어선 5척의 중국 선사들은 한국 정부측의 수산물 수입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참치 및 참치류, 오징어를 계속 수출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이 고위험 선사로부터 총 39건의 참치류, 10건의 오징어가 한국으로 수입 및 유통되었다.

**명태:** AIS 분석 및 여러 정보원을 통한 EJF 조사에 따르면, 2021년 5월 조업 허가 없이 일본 EEZ에서 불법 어업한 정황이 발견된 한 러시아 국적 어선을 소유한 러시아 선사이자 수출 업체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명태를 29건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유통됐다.

**가자미류:** IUU 위험도가 높은 가자미류도 13건 한국으로 수입되었는데, 이 중 9건은 2021년 1월 기니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한 혐의를 받은 이탈리아 어선에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4건은 2020년 3-6월간 시에라리온에서 무단 조업 혐의를 받은 중국 트롤 어선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어선에 잡힌 오징어 @EJF

## 4.4. 투명성 부족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유통공급망은 아주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수산물 이력 추적 규정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불투명한 유통망 체계이다. 수입산 STS는 수산물 안전을 위해 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수산물의 안전 여부를 알아야 하는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에게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sup>92</sup>

수입산 STS와 별개로 운영되는 국내 STS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된다. 국내 STS는 소비자가 QR코드나 수산물 이력번호를 통해 최소한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수입산과 국내산 구별없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는 수산물의 안전성, 구체적인 원산지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합법성 및 윤리적인 측면 등으로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수산물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할 것이고, 이 정보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쉽게 전달되어야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소비 추세와 함께 수산물 공급망에 투명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정확하고 현행화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 이력제와 수입산 수산물 이력신고제를 통합하여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 공급망에서 IUU 어업 및 관련 범죄, 어선원 노동 착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IJF는 중국을 비롯한 고위험 국가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한국 정부가 이력추적 규정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IUU 어업과 노동 착취로 어획된 수산물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추적 관리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 미미하지 않을 것이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 IUU 어업 및 어선원 노동 착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것은 고갈되는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취약한 어선원이 겪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바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대 @EIJF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 공급망에서 IUU 어업 및 관련 범죄,  
어선원 노동 착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JF는 중국을 비롯한 고위험 국가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력추적 규정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IUU 어업과 노동 착취로 어획된 수산물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추적 관리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 미미하지 않을 것이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 IUU 어업 및 어선원 노동 착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것은 고갈되는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취약한 어선원이 겪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 바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부산 어시장 판매대 @EJF

## 5. 제언 사항

본문에서 제시한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의 4가지 주요 문제점과 실제 사례 145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역량의 수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수산물 이력추적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EIJF는 각 이해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은 제언 사항을 마련했다.

### | 해양수산부

- 어획증명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에 17개 핵심정보요소(KDE)를 추가한다 (표3 참조). IUU 고위험 수입 수산물을 제대로 식별하고, 어획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간편어획증명서 KDE를 대폭 강화한다.
- 어획증명제도와 이력제 적용 어종을 확대한다. 위험도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근거해야 한다. 위험도 분석 과정에서 어선원 인권 침해 요소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소비자가 이용가능한 윈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 어획증명제도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를 통해 입수된 정보 중,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윈스톱 디지털 플랫폼 “이력추적관리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 냉동 꽂치는 현재 어획증명제도 적용 어종이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제 의무 어종이므로 해당 정보를 통합하고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적정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식약처 및 관세청 등 부처간 협업이 필수이다.<sup>93</sup>
- 글로벌 투명성 현장을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 | 수산물 판매, 무역 및 유통업체(도소매업자)

- 수산물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실사(Due Diligence)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거래사(수출업체)의 제품 출처와 생산자의 조업활동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요구한다. PAS 1550 및 수산물 구매 가이드라인은 참조하여 이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sup>94,95</sup>
- 글로벌 투명성 현장을 정부가 채택하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지지를 표명한다. 유효한 실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전체 공개 정보가 많을수록 유통업체들이 효과적인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 시민단체와 함께 수산물 추적 이력 규정 강화에 지지를 표명한다. IUU 어업 및 인권 관련한 고위험 수산물 수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해주어야 유통업체들은 판매 제품에 대한 ESG 리스크가 줄어든다.

### | 모든 소비자

- 구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찾고 물어본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 수산물이 잡힌 바다, 잡힌 방법, 잡은 업체 또는 잡은 사람과 합법적인 어획 여부, 생산 및 유통 과정이 투명한지 여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물어본다.
- 시민단체 요구를 지지한다.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재 실시 중인 수산물 이력제를 적극 이용하고, 정부가 수산물 이력 추적과 관련한 윈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갖추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지지한다.

1 UN Comtrade(2020), World seafood import (HS code 03,1604,1605) 2022.8.23 <https://comtrade.un.org/>  
EU US\$47.4 billion(35%), US US\$22.5 billion(16%), Japan US\$12.8 billion(9%), China US\$ 12.7billion(9%), South Korea US\$5.3billion(4%)

2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국가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2022.8.23 <https://www.mof.go.kr/statPortal/main/portalMain.do> 해조류 섭취량도 포함된 수치임

3 E-나라지표, 수산물소비량(연간1인당)과 자급률, 2022.8.23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1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17)

4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2022.8.23접근 <https://fips.go.kr/p/S020704/#> 수산물 수입 비중 증가 : (17) 27.5% - (18) 31.1% - (19) 31.6%

5 Macfadyen, G. and Hosch, G., 2021. The IUU Fishing Index, 2021. Poseidon Aquatic Resource Management Limited and th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31p, <https://www.iuufishingindex.net/ranking>

6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3 October 2017) Commission warns Vietnam over insufficient action to fight illegal fishing, accessed on 29 August 202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7\\_406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7_4064)

7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2022), The Ever-Widening Net, London, United Kingdom, <https://ejfoundation.org/reports/the-ever-widening-net-mapping-the-scale-nature-and-corporate-structures-of-illegal-unreported-and-unregulated-fishing-by-the-chinese-distant-water-fleet>

8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2019), Caught in the net: Illegal fishing and child labour in Vietnam's fishing fleet, <https://ejfoundation.org/reports/caught-in-the-net-illegal-fishing-and-child-labour-in-vietnams-fishing-fleet>

9 EU IUU fishing Coalition(2020), A comparative study of key data elements in import control schemes aimed at tackl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 the top three seafood market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ttps://www.iuuwatch.eu/wp-content/uploads/2020/11/CDS-2020-report-EN-WEB-Nov-2020.pdf>

10 유엔식량농업기구 FAO(2022) 세계 수산 및 양식 현황 2022. 그림 23, 47 p., <https://doi.org/10.4060/cc0461en>

11 FAO,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accessed on 25.Aug.2022 <https://www.fao.org/iuu-fishing/en/>

12 Sumaila, U. R., Zeller, D., Hood, L., Palomares, M. L. D., Li, Y., & Pauly, D. (2020). Illicit trade in marine fish catch and its effects on ecosystems and people worldwide.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adv.aaz3801>

13 EJF(2019), Fish in Disguise: Seafood Fraud in Korea, 가짜 생선: 수산물 둔갑, 실태와 해결책 [https://ejfoundation.org/resources/downloads/DNA-Report\\_KOR.pdf](https://ejfoundation.org/resources/downloads/DNA-Report_KOR.pdf) 수산물34.8%, 302개 샘플 중 105개가 원산지가 잘못 표기되어 판매됨

14 KMI, 보도자료(2022.6.22), 2022.9.2접근 해양수산에 대한 국가인식조사,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164&page=2&idx=3308>

15 UN Comtrade(2020), World seafood import (HS code 03,1604,1605) 2022.8.23 <https://comtrade.un.org/>  
EU US\$47.4 billion(35%), US US\$22.5 billion(16%), Japan US\$12.8 billion(9%), China US\$ 12.7billion(9%), South Korea US\$5.3billion(4%)

16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국가별 수출입현황, 2022.8.25일 접근 <https://fips.go.kr/p/S020706/>

17 상동.

18 Macfadyen, G. and Hosch, G., 2021. The IUU Fishing Index, 2021. Poseidon Aquatic Resource Management Limited and th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31p, <https://www.iuufishingindex.net/ranking>

19 Belhabib, D., & le Billon, P. (2022). Fish crimes in the global oceans. In Sci. Adv. (Vol. 8), <https://www.science.org/doi/10.1126/sciadv.abj1927>

20 EJF (2022), The Ever-Widening Net, London, United Kingdom, <https://ejfoundation.org/reports/the-ever-widening-net-mapping-the-scale-nature-and-corporate-structures-of-illegal-unreported-and-unregulated-fishing-by-the-chinese-distant-water-fleet>

21 해양경찰청 E-나라지표 외국 어선 단속, 2022.8.25 접근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2](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2)

22 IUU 어업지수(2021) 국가별 지표: 러시아 2위, 2022.8.25접근 <https://www.iuufishingindex.net/profile/russia>

23 WWF(2014), Illegal Russian Crab An Investigation of Trade Flow © Bjorn Solberg Guliksen, [http://assets.worldwildlife.org/publications/733/files/original/WWF\\_Illegal\\_crab\\_report\\_final\\_15\\_Oct\\_2014.pdf?1413407573](http://assets.worldwildlife.org/publications/733/files/original/WWF_Illegal_crab_report_final_15_Oct_2014.pdf?1413407573)

24 WWF(2020) Case Study on Russian King Crab Sourcing and Traceability Pilot 2019 CASE STUDY ON RUSSIAN KING CRAB SOURCING AND TRACEABILITY PILOT 2 CASE STUDY ON RUSSIAN KING CRAB SOURCING AND TRACEABILITY PILOT. <https://www.worldwildlife.org/publications/case-study-on-russian-king-crab-sourcing-and-traceability-pilot>

24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2021), 2021 Report to Congress on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28p <https://media.fisheries.noaa.gov/2021-08/2021ReporttoCongressonImprovingInternationalFisheriesManagement.pdf>

25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3 October 2017) Commission warns Vietnam over insufficient action to fight illegal fishing, accessed on 29 August 202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7\\_406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7_4064)

26 EJF(2019) Caught in the Net: Illegal Fishing And Child Labour In Vietnam's Fishing Fleet <https://ejfoundation.org/reports/caught-in-the-net-illegal-fishing-and-child-labour-in-vietnams-fishing-fleet>

27 Hosch, G. & Blaha, F. 2017. Seafood traceability for fisheries compliance – Country level support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al Paper No. 619. Rome, Italy. Annex Definitions, p101, <https://www.fao.org/3/i8183e/i8183e.pdf>

28 FAO(199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Rome, 41 p. <https://www.fao.org/iuu-fishing/resources/detail/en/c/879859/>

29 FAO (2001) IPOA-IUU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Rome, (69) (71) <https://www.fao.org/3/y1224e/Y1224E.pdf>

30 FAO(2017) Voluntary Guidelines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Rome. 20 pp. <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a6abc11e-414a-491b-888a-7819dabdac1d>

31 Hosch, G. & Blaha, F. 2017. Seafood traceability for fisheries compliance – Country level support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FAO Fisheries and Aquaculture Technical Paper No. 619. Rome, Italy. Annex Definitions, p101, <https://www.fao.org/3/i8183e/i8183e.pdf>

32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 항만국 검색, 동법 시행규칙 제23조1항 입항신고 및 항만국검색 3호, 2022.9.1 접근 [https://www.law.go.kr/법령/원양산업발전법\(20230112,18755,20220111\)/제14조](https://www.law.go.kr/법령/원양산업발전법(20230112,18755,20220111)/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20210820,00493,20210820\)/제23조](https://www.law.go.kr/법령/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20210820,00493,20210820)/제23조)

3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2022. 9. 1 접근, [https://www.law.go.kr/법령/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20210615,18287,20210615\)/제27조](https://www.law.go.kr/법령/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20210615,18287,20210615)/제27조)

34 FAO (2001) IPOA-IUU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Rome, Para.65-76 <https://www.fao.org/3/y1224e/Y1224E.pdf> / Multilateral CDS are based on RFMO CMMs, compliance with multilateral CDS is mandatory at all stages of the supply chain 국가차원의 CDS와 달리, 다자간 CDS는 RFMO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다자간 CDS 준수가 필수임

35 European Un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346, 27 November 2013, COMMISSION DECISION of 26 November 2013 on notifying the third countries that the Commission considers as possible of being identified as non-cooperating third countries pursuant to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2013/C 346/03), 27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3D1127\(02\)&from=EN](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3D1127(02)&from=EN)

36 EJF, news media (21 Apr 2015) EU Removes South Korea From List Of Those Failing To Combat Pirate Fishing, accessed on 3 Sep 2022, <https://ejfoundation.org/news-media/eu-removes-south-korea-from-list-of-those-failing-to-combat-pirate-fishing>

37 해양수산부, 어획증명제도 설명자료(Q&A)( 2017.6.29)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87&boardKey=23&articleKey=16679>

38 한국수산회,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 (2018.7.16) 2022.9.4접근 [https://www.fsis.go.kr/front/contents/cmsView.do?cate\\_id=0101&cnts\\_id=21606&select\\_list\\_no=5](https://www.fsis.go.kr/front/contents/cmsView.do?cate_id=0101&cnts_id=21606&select_list_no=5)

39 다른 화물과 함께 입항하는 경우 하선이 허용됨.

40 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 웹사이트, <https://www.fishtrace.go.kr/home/homeEng/actionEngHome.do>

41 상동

4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0.9.28) "10월부터는 해수부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관리합니다" <https://www.mof.go.kr/iframe/article/view.do?articleKey=35764&boardKey=10&menuKey=376&currentPageNo=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22-39 호, 시행일 '23.1.1.)

43 [https://www.law.go.kr/법령/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20210615,18287,20210615\)/제31조](https://www.law.go.kr/법령/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20210615,18287,20210615)/제31조)  
<https://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232965&joNo=0031&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D%2595%25B4%25EC%2596%2591%25EC%2588%2598%25EC%2582%25B0%25EB%25B6%2580%25EC%259E%25A5%25E 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7%258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InfSeq=21307>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 21개 품목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돌, 냉동꽃게, 천일염, 냉동꽃게, 열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이, 냉장홍어, 활막장어, 활방어,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4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fqs.go.kr/imst/login/actionLogin.do>

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과태료), 2022.9.3 접근 [https://www.law.go.kr/법령/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20210615,18287,20210615\)/제63조](https://www.law.go.kr/법령/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20210615,18287,20210615)/제63조)

45 European Union Law,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1224/200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9R1224>

46 The US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Fisheries,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accessed on 2 Sep 2022, <https://www.fisheries.noaa.gov/international/seafood-import-monitoring-program>

47 U.S Food & Drug Administration(FDA), Constituent Updates released on 15 November 2022, FDA Announces the Final Rule for Food Traceability Under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accessed on 21 November 2022, <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announces-final-rule-food-traceability-under-fsma>

48 Japan Fisheries Agency, Act on Ensuring the Proper Domestic Distribution and Importation of Specified Aquatic Animals and Plants <https://www.jfa.maff.go.jp/220614.html>

49 Miller, B. D., & Welt, B. A. (2014). Critical Tracking Events Approach to Food Traceability. Encyclopedia of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387–398. <https://doi.org/10.1016/>

B978-0-444-52512-3.00047-4

50 The USAID Oceans and Oceans and Fisheries Partnership (2017). Data Requirements for Catch Documentation and Traceability in Southeast Asia, accessed on 1 November 2022, [https://www.seafdec-oceanspartnership.org/wp-content/uploads/USAID-Oceans\\_Data-Requirements-for-Catch-Documents-KDE-Manual-Dec-2017.pdf](https://www.seafdec-oceanspartnership.org/wp-content/uploads/USAID-Oceans_Data-Requirements-for-Catch-Documents-KDE-Manual-Dec-2017.pdf)

51 EU IUU fishing Coalition(2020), A comparative study of key data elements in import control schemes aimed at tackl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 the top three seafood market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ttps://www.iuuwatch.eu/wp-content/uploads/2020/11/CDS-2020-report-EN-WEB-Nov-2020.pdf>

52 상동

53 FAO(2017) Voluntary Guidelines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Rome. Article 1(b), (c), (d), (e), (f), (g) <https://www.fao.org/documents/card/en/c/a6abc11e-414a-491b-888a-7819dabdac1d/>

54 위 EU 및 미국 KDE 분석은 이전 보고서 차용EU IUU fishing Coalition(2020), A comparative study of key data elements in import control schemes aimed at tackl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 the top three seafood market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18, <https://www.iuuwatch.eu/wp-content/uploads/2020/11/CDS-2020-report-EN-WEB-Nov-2020.pdf>

55 상동

56 Japan Fisheries Agency, Act on Ensuring the Proper Domestic Distribution and Importation of Specified Aquatic Animals and Plants, TECHNICAL NOTE on Class II Aquatic Animals and Plants Ver 2.0, Attachment 7, <https://www.jfa.maff.go.jp/attach/pdf/220614-3.pdf>

5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022년 11월 29일 접속, <https://www.law.go.kr/법령/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20210615,18287,20210615/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20224,00536,20220224/제29조>

58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국가별 수출입 현황, 2022.8.25 <https://fips.go.kr/p/S020706/>

59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2021), 2021 Report to Congress on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https://media.fisheries.noaa.gov/2021-08/2021ReporttoCongressonImprovingInternationalFisheriesManagement.pdf> /Taiwan's alleged non-compliance with WCPFC, IATC, ICCA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regarding shark fisheries and Taiwan government's lack of corrective actions  
사유: 대만이 상어 어업에 관한 WCPFC, IATC, ICCAT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만 정부의 시정 조치 부족

60 Taiwan Company Network, AN FONG Fishery Co. information accessed on 26 Aug 2022, <https://www.twincn.com/item.aspx?no=53532218>,  
World Shipping Register, AN FONG LIAN MAN Fishery Co. accessed on 26 Aug 2022, <https://world-ships.com/company/e1267960dbe7ae51517aa46825104cdc#.Y20K1-xBxKc>

61 Taiwan Fisheries Agency, List of Violations of Distant Sea Fishery Regulations 111 (as of October 7, 111), [https://www.fa.gov.tw/view.php?theme=Fight\\_IUU\\_fisheries&subtheme=&id=24](https://www.fa.gov.tw/view.php?theme=Fight_IUU_fisheries&subtheme=&id=24)

62 상동

63 Taiwan Fisheries Agency, List of Violations of Distant Sea Fishery Regulations 111 (as of October 7, 111), [https://www.fa.gov.tw/view.php?theme=Fight\\_IUU\\_fisheries&subtheme=&id=24](https://www.fa.gov.tw/view.php?theme=Fight_IUU_fisheries&subtheme=&id=24) Fine on vessel owner NT\$500,000(=US\$16,503), on the Captain NT\$100,000 (= US\$3,300)

64 해당선박 ANFONG No.111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 [https://globalfishingwatch.org/carrier-portal/?layer\[0\]=encounter&layer\[1\]=cp\\_rfm&layer\[2\]=cp\\_next\\_port&latitude=22.5501483&longitude=120.2996283&zoom=0.751607&dataset=carriers:v20220124&vessel=eb22037b8-87f1-f44b-03d5-9e7eaa-942ca&start=2021-01-01&end=2022-02-28&timestamp=1624828203000](https://globalfishingwatch.org/carrier-portal/?layer[0]=encounter&layer[1]=cp_rfm&layer[2]=cp_next_port&latitude=22.5501483&longitude=120.2996283&zoom=0.751607&dataset=carriers:v20220124&vessel=eb22037b8-87f1-f44b-03d5-9e7eaa-942ca&start=2021-01-01&end=2022-02-28&timestamp=1624828203000)

65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정보마루, 2022.9.12 접근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

66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2022.8.25 접근 <https://fips.go.kr/p/S020706/>

67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 항만국 검색, 동법 시행규칙 제23조1항 입항신고 및 항만국검색 3호, 2022.9.1 접근 <https://www.law.go.kr/법령/원양산업발전법/20230112,18755,20220111/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20210820,00493,20210820/제23조>

68 FishBase, developed a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Living Aquatic Resources Management (ICLARM) in collaboration with the FAO, accessed on 29 September 2022, <https://www.fishbase.se/summary/Larimichthys-polyactis>

69 FAO(2022) Larimichthys polyactis Bleeker,1877. Fisheries and Aquaculture Division [online]. Rome., accessed on 29 Sep 2022, <https://www.fao.org/fishery/en/aqspecies/2362/en>

70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2017. 1.17 보도자료, 남획은 아프리카 서부 및 중부 해안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많은 어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음, <https://www.iucn.org/news/secretariat/201701/overfishing-threatens-food-security-africa%E2%80%99s-western-and-central-coast-many-fish-species-region-face-extinction-%E2%80%93iucn-report>

71 FAO (2022) Pseudotolithus elongatus Bowdich,1825. Fisheries and Aquaculture Division [online]. Rome. accessed on 12 Sep 2022, <https://www.fao.org/fishery/en/aqspecies/2365/en>

72 FishBase, developed a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Living Aquatic Resources

Management (ICLARM) in collaboration with the FAO, accessed on 15 September 2022, <https://www.fishbase.se/summary/SpeciesSummary.php?ID=433&AT=bobocroaker>, <https://www.fishbase.se/summary/SpeciesSummary.php?ID=4550&AT=longneckcroaker>

73 EJF, Media (9 June 2021) Exiled in Sierra Leone, <https://ejfoundation.org/news-media/exiled-in-sierra-leone>

74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s://btis.mpm.go.kr/rpt/selectRpt.do>

75 2018년 EJF 내부 현장 조사 보고서

76 2018년 EJF 내부 현장 조사 보고서

77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시에라리온 및 기니 출장 보고서(2018.5) 2022.9.28 접근 <https://btis.mpm.go.kr/rpt/selectRpt.do>

78 국경 너머 아프리카, 2021년 3월 3일 출시, 수산위원회는 2022년 11월 8일에 한 일부 어업 회사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합니다. <https://beyondbordersafrica.com/parliament-threatens-to-close-some-fishing-companies/>

79 Beyond Borders Africa, released on 3 Mar 2021, Committee on fisheries threatens to close some fishing companies, accessed on 8 November 2022, <https://beyondbordersafrica.com/parliament-threatens-to-close-some-fishing-companies/>

8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정보마루, 2022.10.18 접근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

81 Sierra Leon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SierraLII"). Judgement of High court, [2020] SLHC 221, accessed on 20 Oct 2022, <https://sierralii.org/sl/judgment/high-court/2020/221>

82 EJF(2019) Red Flags: The story of the MAHAWA and transparency standards In fishing <https://ejfoundation.org/news-media/red-flags-the-story-of-the-mahawa-and-standards-of-transparency-in-fishing>

83 EJF(2020), Off The Hook : 편의의 깃발이 불법 낚시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 <https://ejfoundation.org/reports/off-the-hook-how-flags-of-convenience-let-illegal-fishing-go-unpunished>

84 유엔 해양법 협약 제92조

85 EJF 내부 조사

86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시에라리온 및 기니 출장 보고서(2018.5) 2022.9.28 접근 <https://btis.mpm.go.kr/rpt/selectRpt.do>

87 EJF 내부 조사 및 2018년 3월 해양수산부에 브리핑 전달

88 EJF(2019) 'Trawler fined for targeting undersized fish with illegal nets in Ghana', EJF, accessed 11.10.22. <https://ejfoundation.org/news-media/trawler-fined-for-targeting-undersized-fish-with-illegal-nets-in-ghana>

89 EJF(2020), 'Trawlers charged with illegal fishing continue to dodge fines in Ghana', EJF, accessed 11.10.22. <https://ejfoundation.org/news-media/trawlers-charged-with-illegal-fishing-continue-to-dodge-fines-in-ghana>

Godfrey, M. (3.3.20), 'Chinese trawler fishing in Ghana again, without paying USD 1 million fine', SeafoodSource, accessed 11.10.22.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hina-trawler-fishing-in-ghana-again-without-paying-usd-1-million-fine>

Yeboah, I. (31.5.20), 'Marine Police arrest 'notorious vessel' over juvenile fishing', Graphic Online, <https://www.graphic.com.gh/news/general-news/marine-police-arrest-notorious-vessel-over-juvenile-fish.html>

90 NewsGhana, 28 Sep 2022, China's Capture Of Ghana's Fishing Industry Threatening Food Security, accessed on 17 Oct 2022, <https://newsghana.com.gh/chinas-capture-of-ghanas-fishing-industry-threatening-food-security/>

91 SeafoodSource, 24 Aug 2020, Previously-fined Chinese vessel given Ghanaian fishing permit, despite lack of payment, accessed 29 Sep 2022,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previously-fined-chinese-vessel-given-ghanaian-fishing-permit-despite-lack-of-payment>

9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소개, 2022.9.6 접근 <https://www.nfqs.go.kr/hpmpg/qumg/actionImportFishSupplyForm.do?menuId=M0000404>

93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대상은 특수영양식품(영유아 식품, 조제유류, 제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이며, 수산물을 제외됨 <https://www.food.go.kr/tfweb/nis/nis102Content.do>

94 EJF(2017), PAS 1550:2017 Exercising due diligence in establishing the legal origin of seafood products and marine ingredients – Importing and processing – Code of practice, [https://ejfoundation.org/resources/downloads/PAS\\_1550.pdf](https://ejfoundation.org/resources/downloads/PAS_1550.pdf)

95 EJF(2017), an advisory note for the uk supply chain on how to avoid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ery products <https://ejfoundation.org/reports/an-advisory-note-for-the-uk-supply-chain-on-how-to-avoid-illegal-unreported-and-unregulated-iuu-fishery-products>



부산 감천항 Source: [www.kogl.or.kr/index.do](http://www.kogl.or.kr/index.do)

**EJF**, Unit 417, Exmouth House 3/11 Pine Street, London, EC1R 0JH, UK  
Tel: +44 (0) 207 239 3310 | Email: [info@ejfoundation.org](mailto:info@ejfoundation.org)  
[ejfoundation.org](http://ejfoundation.org) | Registered charity, No. 1088128



*Protecting People and Planet*